

2020년도 공직 유관단체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 특정감사

지적사항 및 조치계획

☐ 감사기간 : 2020. 3. 23. ~ 2020. 4. 6.

☐ 감사조치 : 2020. 10. 15. 한

☐ 감사결과 요약

처분요구	제목	지적사항	조치계획	비고
통보	징계의 종류 및 효력, 의결방식·실효성 등 확보방안 마련 필요	·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, 의결방식과 근로기준법의 감급 규정들을 검토하여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권고	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, 가중처벌 기준 불합리	·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 감경, 포상 제한, 가중처벌 기준 등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 감경 및 포상 제한, 가중처벌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음.	
통보	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마련 필요	· 공무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및 기준 등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부가금 부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권고	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직 및 전보 제한기준 마련 및 개정 필요	·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자 등의 보직 및 전보 제한 기준 등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처분자 등의 보직 및 전보 제한 기준 등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권고	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 면직 제한 기준 규정 미비	·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 면직 기준 등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처분자에 대한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기준 등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통보	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 미비	·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 등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준 등 징계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
처분요구	제목	지적사항	조치계획	비고
통보	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·수당, 평가급(성과급) 감액기준 합리적 정비방안 마련 필요	·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관계 법령,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·수당, 평가급(성과급) 감액 기준을 고려하여,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,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보수·수당, 평가급(성과급) 감액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.	
통보	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미비	·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금 관련 규정과 공무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퇴직금 및 명예퇴직 수당 환수 및 지급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퇴직급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.	
통보	징계처분자 처분내역 기록 및 말소처리 기준 마련 등 관리방안 필요	·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징계 처분 내역 기록관리 및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 등의 처분에 따른 이력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통보	징계 외의 신분상 처분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미비	·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징계 외의 처분결과에 대한 제시된 권고(안) 내용 반영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징계 외의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.	
통보	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 및 조회방식 규정 미비	· 임직원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 마련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임직원 채용제한 결격사유 기준 및 조회방식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음.	
권고 통보	음주운전 이력 정기 점검 및 운전직 채용요건 강화 기준 미흡	· 매년 1회 이상 음주운전 이력 정기점검 실시	·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,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음.	
주의요구	임원 임명 시 결격사유 미 조회	· 임원 임명(연임 포함) 시 해당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	·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완료 : 20. 3. 5. ~ 3. 26.	시정 완료